

# 국감서 5·18 위자료 격차 지적...광주지법 “논의 하겠다”

### 민주 김승원 의원 “법원따라 최대 4배 차이...피해자들 개선 호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국가폭력 희생자·유족 또다른 2차 가해”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광주지법이 서울법원보다 위자료 산정을 작게 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 차원뿐 아니라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법원마다 5·18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해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면서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 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지법원장은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

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의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을 보면 5·18 당시 사망자는 4억원으로 광주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망자 위자료 기준(2억원)보다 두 배 많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서울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광주법원에 제기하는 것보다 2~4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5·18 당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입장문을 통해 “1980년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와 인명살상, 인권탄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배상액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에게 “제주 4·3 사건 재심이 광주고법과 제주지법 중 어느 곳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신속히 결정하지 못



대전고등법원에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기열(앞줄 왼쪽)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태 광주지법법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 2년여간 재판 개시가 지연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배 고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10월 17

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김 부장은 잘하고 계시나. 굉장히 청렴하고 좋은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

을 한 검사에 대한 검찰 또는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검찰은 “검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감찰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의혹 공방전·뜬금포 질의...광주·전남 법원·교육청 ‘맹탕 국감’ 비판

### 대부분 시간 의사발언으로 허비

### 김건희 불기소·이재명 의혹 설전

광주·전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기관의 현안보다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고 맥락을 벗어난 질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1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국감의 많은 시간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비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가 검찰의 봐주기 시수사라며 맹비난하자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 등 공방만 벌이다 국감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처분)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공격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도 발로 안보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이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발언 하다가 국감이 끝나겠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국감 시작하자”고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허법원은 이날 질문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율성 공영 등 해묵은 이념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민전(비례)의원은 광주에서 정율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

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정율성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내 정율성 공원을 설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나설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율호(비례) 의원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에게 “5·18에 대한 폄훼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전남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대학 총장으로서의 이에 대한 답변을 국감에서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전남대는 5·18 발상지임을 고려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18 연구소가 학교 안에 있으며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교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신축 아파트 하자 요청 3년새 6배 폭증

### 전남도 3배 가까이 늘어

광주에서 신축 주택(아파트)을 사전방문 점검한 데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만 1084건, 2022년 4만 1299건, 2023년 6만 7035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6배 넘게 요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021년 8만 3440건, 2022년 15만 5559건, 2023년 18만 9543건의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접수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의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2021년 139만 3581건에서 2023년 481만 7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주택 건설 준공 실적은 2021년 5035건에서 2022년 1만 2453건으로 급증했으나, 2023년 다시 8805건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21년 1만 5345건, 2022년 1만 6090건, 2023년 1만 7347건의 준공 실적을 올렸다.

서 의원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이 전보다 철저히 하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다. 서 의원은 이에 맞물려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은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인데, 완벽한 물건은 고사하고 하자 투성이 주택을 받는 데다가 심지어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